

국가·계급·민족·문화* 한국사회의 정태와 동태 분석을 위한 시론

임현진** · 정영철***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질풍노도와 같은 변화를 겪어왔다. 지난 반세기에 걸친 변화는 한편으로는 혁명적인 근대화로의 길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립과 갈등의 지속적인 구조화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 계급, 민족, 문화의 네가지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우선, 국가와 민족이다. 국가와 민족은 근대 역사의 산물이다. 유럽에서의 절대주의의 붕괴, 자본의 혁명, 국제관계의 변화 등으로 민족주의는 탄생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민족주의는 자신들만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또한 불분명한 경계도 국가에 의해 비로서 하나의 완전한 민족으로서 선언되고 공표된다. 근대 역사는 바로 이러한 국가와 민족의 변증법적 통합의 과정이었다.

둘째로, 민족과 계급이다. 근대 역사에 있어서 계급과 민족은 항상 갈등과 대립을 낳았다. 특히, 계급주의를 우선하는 사회주의 사상과 민족주의의 대립이 그러했다. 그러나 서유럽이나 제3세계에서나 계급주의는 언제나 민족주의에 양보하거나 혹은 결합하고 있었다. 계급과 민족의 변증법적 동학이 형성된 것이다.

셋째로, 민족과 문화이다. 문화는 민족을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이다. 문화로 인하여 민족 구성원들은 자신을 타자와 구별짓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상징체계

*이 논문은 1993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요 관심분야는 비교사회학, 사회발전론 등. 주요저서 및 논문에 『지구 시대 세계의 변화와 한국의 발전』(1998), “미국과 멕시코의 환경문제와 발전전략-비만형과 빈곤형의 연관”(1996) 등이 있다(연락처: 02-880-6412, E-mail: hclim@rome.snu.ac.kr).

***경희대 강사. 주요 관심분야는 북한 사회. 주요저서 및 논문에 “북한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1996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북한 ‘인민’의 생활세계 연구: 1980, 90년대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통일원, 1996), 김귀옥과 공동연구, “북한 사회통제 메카니즘의 변화와 특성” 1997년 겨울, ‘통일문제연구’ 등이 있다(연락처: 02) 880-6412).

와 삶을 규정짓는다. 소위 ‘일국가 일문화’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문화는 민족을 통합하기도 분열시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계급이다. 맑스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구이며, 이후의 맑시스트들에게도 국가는 결국 자본주의 지배도구 및 계급파의 관계로 귀착한다. 국가와 계급간의 관계는 결국 민주주의 문제로 귀착된다. 국가를 둘러싼 계급간의 힘 관계가 결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국가, 계급, 민족, 문화의 네 요소는 단일 민족성과 국가 중심성, 문화적 동질성과 집 단주의, 민주주의와 계급주의의 대립으로서 나타난다. 전혀 ‘제3의 길’을 허용하지 않았던 지나온 파거가 보여주듯이 한국에서의 이 네가지는 언제나 충돌하였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전지구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진로가 불투명한 채로 남아있다. 민족문제 와 더불어 지구화의 물결에 대응해야 하며, 민주주의의 완성도 문제로 남아있다. 결국 한국사회는 현재의 ‘한국’을 가능케 한 정태와 동태의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함께 향후 지금까지의 사회변화의 동학을 변화시키는 ‘동학의 동학’도 아울려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1. 머리말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는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감과 아울러 불안감으로 혼돈을 느끼고 있다. 자본주의에 의한 전지구화(globalization)가 통합과 분열이라는 서로 모순된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계층, 세대, 부문, 성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넘어 포용과 화합을 향한 사회발전을 달성하여야 하는 지난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오늘에 이른 현대 한국사회는 ‘질풍노도’의 변화를 겪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반세기 이상에 걸쳐 경험한 여러 가지 진화론적이고 혁명적인 변화에 의해 잘 파악될 수 있다. 해방과 좌우대립, 남북분단과 전쟁, 혁명과 쿠데타, 유신과 민주화투쟁, 민중봉기와 독재, 사회운동과 개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역사의 단축’으로 비유되는 한국의 급속하고 격렬한 사회변화는 비교시각에서 볼 때 매우 유용한 사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구조와 변동은 너무도 복잡다단해서 그것을 보편적인 인과율에 의해 포착하기 곤란하다. 지금까

지 나타난 수많은 사회이론이 독자적인 파라다임으로서 용지불갈의 현실적 합성을 지니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이라는 시공적인 장(場)에서 사회 구조와 변동의 역학을 이해할 때 우리사회의 정태와 동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한국사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글은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극심한 변화의 굴곡을 거쳐 온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동의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한 문제들을 탐색적으로 찾아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계급, 민족, 문화라는 자못 거창한 네가지 개념의 분석을 통해 그것들이 서로 맞물리는 연관성 속에서 한국사회의 정태와 동태의 핵심적 원리를 발견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려 한다. 물론 국가, 계급, 민족, 문화라는 네가지 개념 하나 하나 자체가 매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이기에 그중 하나를 제대로 다루기도 훨씬 자들로서는 매우 벅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과학의 학문적 경향이 대체로 사회구조와 변동을 이해하는 데 일면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네가지 틈새를 이어보려는 소박한 의도에서 이글은 출발하고 있다.¹⁾

사실상 한국사회만치 비교문명의 시각에서 그것의 형성, 유지, 변모가 여러 가지 안팎의 상수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오래된 국가의 전통, 강력한 민족의 이념, 고유한 문화의 유산, 역동적 계급 관계 등에서 볼 때 한국사회는 매우 특징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단순히 순환론이나 진화론, 정신론과 물질론, 내인론과 외인론, 혹은 상황론과 결정론과 같이 일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면모를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나타내왔다. 바로 이점에서 국가전통, 민족이념, 문화유산, 계급관계 등을 분석적으로 적분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필요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과학은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고구하는 과정에서 통전성의 추구란 미명아래 지나치게 일원론적인 접근방법에 의존해 온 감이 없지 않다. 이는 과거 산업사회론의 영향 아래에서 민족이나 문화에 의해 사회발전의 동인을 보려했던 경향이나, 자본주의사회론의 열풍 속에 국가나 계급에 의해 역

1) 원래 이 글은 3부작으로 기획되었다. 첫째로는 한국사회의 내적 동학의 원리를 살펴보는 이론적 작업을 전개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내적 관계에 대한 고찰이며,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세계체제론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글은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

사진보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추세나, 혹은 근래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바람에 따라 민족, 국가, 문화, 계급과 같은 대서사를 해체하여 성, 지역, 세대, 집단 등에 따른 차이와 정체의 현실을 보려는 유행에 의해 잘 예증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국사회의 정태 및 동태 분석을 보다 철저하고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종합적이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종합론적 문제들은 한국사회의 변동과정을 사회문화적이고 정치경제적인 복합적 맥락안에 위치시켜 줌으로써 변화무쌍한 역사과정 속에서 국가, 계급, 민족, 문화가 지니는 역학관계를 변증법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인식의 지평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글은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서술이라기 보다는 이론적인 논의이다. 따라서 기존의 우리 학계의 연구성과를 중시하지만, 여기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구체적인 분석과 설명을 위한 시론적인 문제들의 설정에 주된 목적이 있다.

2.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동의 역학: 문제틀의 구성

1) 국가와 민족

국민국가(nation-state)는 근대 역사의 산물이다. 맑스주의 진영이나 자유주의 입장은 자본주의와 시민사회와 마찬가지로 근대성(modernity)이 가져온 가장 커다란 변화의 일부로서 국민국가를 바라본다(Migdal, 1997: 209). 이렇듯이 근대적 산물로서 국가는 서부 유럽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간 국제체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더불어 오늘의 세계질서의 기본 축을 형성하고 있다.²⁾ 대체적으로 국가는 민족을 구성단위로하여 성립되어 있다. 하나의 민족이 복수의 국가를 만들거나 복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고, 또한 불안정한 국민국가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러한 국가와 민족의 결합체로서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가 현 시대를

2) 현재 이러한 근대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지구화의 현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폴 캐네디의 지적처럼 아직 국가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그 무엇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폴 캐네디, 1993: 174).

대표하는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계질서의 기본 단위로서 국민국가의 실체를 부정할 수도 있다. 월러슈타인은 근대 국민국가를 자율적이고 평등하다고 보지 않는다. 국가는 민족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산물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중심과 주변 사이의 수취와 충용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가간 위계는 있지만 주권을 갖는 국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 있어 국가간 국제체제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정치적 표현으로서 그 상부구조에 지나지 않는다(Wallerstein, 나종일·백영경 옮김, 1993).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적인 의미의 국민국가는 서부 유럽에서 절대주의 왕정이 붕괴하면서 등장하였다. 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부르조아들이 자신들의 활동 범위 안에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문화적 상징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인종적 집합체들 사이에 공통의 역사를 창조하면서 국민국가는 출현하게 된다(Migdal, 1997: 21-231). 특히 프랑스 혁명을 통한 혁명이념의 전파, 그중에서도 연대(faternity)의 정신은 분열되었던 사람들의 형제애적 가치와 공동체적 동질성의 감정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유럽에서 빈번하게 치러졌던 전쟁 또한 정치적 통제와 재정적 필요의 증대에 따라 중앙집중적인 관료제를 가져옴으로써 주권과 영토와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국가가 나타나게 되었다(기든스, 1991; 틸리, 1994).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은 국가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수많은 논쟁을 가져왔다. 맑스주의 진영의 국가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자본주의와의 관련하에서 전개된다. 맑스가 국가를 계급지배의 도구로서 정의내린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 있어 국가는 자본주의를 유지, 강화, 재생산시키는 도구 내지는 구조적 총체이다(Milliband, 1969; Poulantzas, 1973). 이와 달리 자유주의 입장의 국가에 대한 정의는 자본이해와 계급지배와 무관한 것으로 국가를 파악한다. 베버에게 있어 국가는 물리적 힘의 합법적 사용으로 특징지워지는 배타적인 정치조직체이다. 따라서 그에게 근대 국가(the Modern State)는 국가(the state)라는 정치적 결사체(potitical associations)의 특수한 형태일 뿐이다(Pierson, 1996: 6). 국가는 대내적으로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여 주민의 일부를 분할적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주민 전부를 기준의 국가를 대체하여 지배하려는 영토내의 어떠한 다른 조직도 허용하지 않는 전일적 통치조직체임을 뜻하고, 대외적으로는 특정 영토와 주민을 지배함에 있어 다른 국가나 국제조직에 의한

간섭 및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주권적 통치조직임을 뜻한다(성경룡, 1995: 17-19).

국가의 성격에 관해서는 피어슨의 다차원적인 정의가 유용하다. 폭력적 수단의 독점적 통제(monopoly control of the means of violence), 영토성(territoriality), 주권(sovereignty), 입헌성(constitutionality), 비인격적 권력(impersonal power), 공공 관료제(the public bureaucracy), 권위/정당성(authority/legitimacy), 시민권(citizenship), 그리고 징세(taxation) 등이 국가의 특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틸리는 일정한 영토내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경우 국가라고 규정한다. 첫째로, 동일한 영토내에서 기능하는 다른 조직과는 구분될 것, 둘째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셋째로, 조직의 분업이 서로간에 공식적으로 조화되고 있을 것이다(Linz & Stepan, 1996: 7의 주 5)에서 재인용). 알포드와 프리드랜드는 국가에 대한 다원주의, 관리주의, 계급주의 시각에서 그 성격을 해부한다. 다원주의 시각은 국가를 이익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서 민주주의 측면을 이해하려 하고 있으며, 관리주의의 시각은 국가를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면서 관료주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계급주의의 시각은 국가를 계급 사이의 갈등관계로 파악하면서 자본주의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알포드와 프리드랜드, 1989: 17-20).

그러나 이와같은 국가형성과 정의에 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자들이 논의하는 국가가 국민국가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서부 유럽의 경우 국가형성(state formation)은 곧 민족을 중심으로한 국민의 형성(nation-building)과 궤를 같이한다. 일반적으로 민족의 형성은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위로부터의 조작(홉스봄, 1994), 혹은 인쇄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의 형성(앤더슨, 1991), 혈연과 족(ethnie)의 역사적인 지속의 산물(Smith, 1986), 문화와 역사적 상징을 통한 조작과 집합적 기억의 창조(Hobsbawm & Ranger, 1983; Smith, 1993), 산업화에 따른 근대화의 전략의 결과(Gellner, 1983) 등의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민족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국가임에 틀림없다. 이는 민족의 형성과 그와 연관된 민족주의의 도래가 지니는 공통적인 특징으로서 바로 자신들만의 정치체를 결성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의 강화가 민족을 낳고, 국민국가라는 정치체를 통해 자결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던 것이다.³⁾

일반적으로 국민국가(nation-state)는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민족을 단위로 동질화

된 국민을 기반으로 한 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국가와 민족의 관계에서 볼 때 국가에 의해 민족이 창조되고 유지되어 나가는 국가민족(state-nation)도 있다.⁵⁾ 국가형성이 민족주의의 확대와는 별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국가형성은 민족주의(특히 민족국가에 대한 상상)가 지식인들과 일반대중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한 수세기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주장이다(Linz & Stepan, 1996: 20). 이와 관련하여 민족주의의 대두 혹은 민족의 형성을 국가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틸리는 민족주의를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현상으로서 보려고 한다. 기든스 역시 “민족과 민족주의는 근대국가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함으로써 국가를 중심으로 민족을 이해해야 함을 역설한다. 틸리에 의하면, 민족주의는 2세기 전 다른 두가지 현상으로서 나타났는데, 그 하나가 ‘국가가 주도하는’ (state-led) 민족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를 추구하는’ (state-seeking) 민족주의이다(Tilly, 1994: 133). 이러한 견해는 결국 민족주의를 정치적인 조직체를 형성하려는 역사의 동력으로 파악하며, 국민국가를 이루지 못하는 민족운동은 실패한 혹은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는 데 주된 특징이 있다(김용직, 1995: 157-158).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부르조아 계급은 빠른 성장을 통해 독자적으로 축적된 물적 기반을 통해 정치권력의 쟁취를 위한 시민혁명을 일찍이 도모하였다. 프랑스혁명은 무엇보다도 국민주권론을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에의 귀속 여부가 혈연, 언어, 전통 등 객관적 특성이 아니라 주관적 선택과 결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의 민족이라 함은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국가성원 전체를 뜻하게 된다. 즉, 국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시민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민족개념을 마이네케는 국가민족(state-n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박호성, 1997:

3) 흉스봄은 민족이 민족주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민족을 창조했다고 주장한다(흉스봄, 1994). 한스 콘은 민족주의를 자신들만의 국가를 형성하려는 일종의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콘, 1981: 18).

4) 틸리는 national state와 nation-state를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national state란 중앙 집권적이고 분화된 자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다수의 인접지역과 도시들을 통치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 강한 언어적, 종교적, 상징적 일체감을 공유하고 있는 nation-state를 의미하지는 않는다(틸리, 1994: 4). 따라서 틸리는 전형적인 nation-state의 형태를 보이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5) 르자이(Rejai)와 엔로이(Enloe)도 오래전에 형성의 순서에 의한 nation-state와 state-nation의 구별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신숙희, 1995: 45의 주 80에서 재인용).

35-37). 르낭이 민족을 ‘매일매일의 국민적 결의’라고 한 것도 시민으로서 개인이 민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나 주관적 신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박호성: 37). 앤더슨이나 흉스봄도 이미 성립된 국가가 민족을 창조하는 국가주도의 민족형성(state-led nation-building)의 사례를 거론한 바 있으며, 제3세계의 경우 식민지로부터의 독립후 국가형성과 민족형성이라는 두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혹은 위로부터의 혁명에 의해 민족을 형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민족형성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는 근대 국민국가의 창조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브루윌리는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형성, 지식인 계층의 역할,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의 전환, 상징과 의례(symbols and ceremonials)의 기능을 들고 있고(Breuilly, 1982: 54-71), 텔리와 기든스는 전쟁과 국제관계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기든스, 1991; 텔리, 1994), 앤더슨은 인쇄 자본주의와 순례 등을(앤더슨, 1991), 젤너는 산업화의 효과와 전략(Gellner, 1983) 등을 들고 있다. 이것들을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민족의 형성은 자본의 혁명, 무정부 상태의 국제현실, 문화혁명에 터잡고 있다(임현진·공유식·김병국·설동훈, 1996: 606-608). 첫째로, 자본의 혁명은 봉건적 질서의 해체속에서 새로운 정치 단위체에 대한 모색을 발전시켰고, 국가를 통해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단일 시장의 형성을 가져왔다. 교역과 상품시장의 발전은 멀리 떨어진 지방에 대한 공통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형성시켜 놓았다. 국가는 이러한 자본 혁명의 덕분에 언어와 교육의 통일을 추진하고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의 물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둘째로, 무정부 상태의 국제현실은 국가로 하여금 언제든지 생존을 위한 전쟁준비를 다그쳤으며, 이를 위한 상비군의 건설, 세금의 징수, 중앙통제하의 관리기구의 확장 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중앙권력에 의한 자원추출은 곧 국가의 형성 과정이자 민족을 형성하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물줄기가 되어 버렸다. 셋째로, 문화혁명은 시민의 공동체적 정신의 확장을 가져오게 하였다. 종교적 세계관의 붕괴는 세속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확대, 강화시켰다. 또한 언어와 문화의 통일성에 대한 국가개입의 증대와 공동의 역사적 기억에 대한 강조는 서로 서로 분리된 개인의 동질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그러나 민족의 형성이 이러한 3대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인간 집단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공통의 기억을 만드는 인종적·문화적 공동체로서

족(ethnie)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⁶⁾ 스미스는 ‘누가 민족인가?’,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민족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의식의 기저에 역사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족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그는 폴란드를 예로 들면서, 근대이전(pre-modern)의 족과의 결합(기억, 신화, 전통, 관습, 상징, 인조물 등)이 없다면, 근대적 의미의 폴란드 민족의 재형성(re-construction)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Smith, 1993: 20-23). 콘 역시 프랑스 혁명이 민족주의의 강화와 그 확산을 가져온 가장 강력한 한 요인이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가 민족주의의 출생 시점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는 모든 역사적 운동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도 과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그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됨에 있어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원시적인 감정들을 이용하여 성장해 왔고, 그것은 다름아닌 사회적 집합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역사를 통틀어 발견되는 감정들이라고 한다(콘, 1981: 17-18).

민족형성에 연관된 요인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민족의 형성에 국가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실상 민족형성의 초기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의미하는 것은 거꾸로 민족을 매개로 국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스위스나 미국의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라는 정치적 단위체가 여러 상이한 민족을 담는 그릇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⁷⁾

국가간 국제체제의 긴장과 조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민족적 결합체로서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의 성취를 둘러싼 갈등이다. 선발발전국으로서 유럽의 중심부 국가와 후발발전국으로서 제3세계 주변부 국가의 발전 정책에 있어서 국가적 이익이 우선시되고 있음은 재연을 요치 않는다. 오늘의 자본주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 국가주의(statism)와 민족주의의 결합을 통한 동

6) ethnne(ethnic group)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족’으로 칭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학자들 중 일부는 이 ethnne에 대해 ‘족군(族群)’으로 칭하고 있다. 이와같은 민족(nation), 족군(ethnir or ethnic group), 종족(race)의 개념 분석에 대해서는 방중영·허종국(1998)을 참조할 것.

7) 이점에서 월러슈타인의 국민형성의 과정을 민족외에 종족과 인종을 추가하여 보아야 한다고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민족의 고려가 다수 인종(majorities)에 의한 국민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종족과 인종의 개념은 소수 인종(minorities)에 의한 국민형성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을 갖는다(Wallerstein, 1998: 71-85).

원과 통제가 나타났음이 이를 증명해 줄 것이다.

국민국가의 형성이 유럽의 경우에 하나의 연속적인,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전개되었다면, 비유럽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과정을 밟아왔다. 흡스봄이 예외적으로 치부하는 중국, 한국, 일본은 근대적 민족의 형성이 서구의 침략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국가 통합의 전통과 족이라는 전근대 민족체의 강고한 결합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동남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는 민족적 단위로의 성장 이전에 유럽의 침탈로 인해 인위적인 민족 분열의 과정이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못한채로 남아 있으며, 국가 수준에서의 부족적 단위의 불일치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지식인들의 순례와 인쇄자본주의의 영향 등으로 인위적인 통합이 실현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통합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제3세계의 경우는 민족의 문제가 완결되지 않은채 남아 있는 셈이다.

2) 민족과 계급

일찌기 맑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국민국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데, 그 이유는 국민국가가 부르조아지의 억압기관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Volger, 1985: 2). 따라서 그는 일국에서의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에 대한 희망을 뒤로 한채 전세계적인 노동계급의 연대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예견하였다. 기실 맑스에게 민족은 계급갈등을 은폐하고 부르조아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보편적인 이익으로 나타나게끔 해주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게 민족주의는 혁명에 협력적일 때만 호의적인 형용사로 의미 부여가 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편견으로 처리되었다(데이비스, 1981: 115).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맑스의 예견이 실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급과 민족에 대한 그의 논점도 정확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민족갈등이 한 국가 내의 혹은 국가간의 계급갈등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계급투쟁 공간이 국제적이라기 보다는 국민국가적 수준에서 발생하여 왔다 (Volger: 2-3).⁸⁾ 또한 사회주의 국가간에는 염밀히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아무런 민족

8)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월러슈타인이 계급투쟁이 국가의 경계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로서 즉자적 계급의식은 국제적으로 나타나지만 대자적 계급의식은 국민국가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는 국민국가라는 것이 세계경제의 계급이해에 의해 창조된 정치적 제도

〈표 1〉 계급에 따른 민족주의에 대한 태도 분류

계급구분	소분류	민족주의의 특징	비고(사례-특징)
전통적인 지배계급 (traditional ruling class)	nobility	반대	폴란드, 일본, 헝가리
	traditional states	저항/국가주도의 민족주의 형성	일본, 독일
	traditional rulers in colonial society	반대/연합	나이지리아, 불가리아
	traditional religious authority	혐오/공동적에 대한 동맹	터키, 아일랜드, 루마니아, 그리스
중간계급 (middle class)	businessmen	분열(보호주의-자유무역)	독일, 이태리
	petite bourgeoisie	지지	중동부유럽
노동자계급(working class)		전향, 매수, 변질	국제주의와의 갈등
농민계급(peasants)		외국인 혐오증	
전문가-지식인 (professionals and intellectuals)	professions	지지/창조	독일, 인도
	intellectuals	지지/창조	

*자료: 위의 표는 브루윌리의 내용을 필자들이 간략히 요약한 것임.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구소련 분쟁이나 베트남·캄보디아 갈등 등,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충돌은 민족주의 혹은 민족이익이 국제주의 혹은 계급주의에 종속되거나 소멸될 것이라는 막스주의의 논지가 반드시 옳지 않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민족과 계급의 관계는 단순히 어느 한 요인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만이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브루윌리는 민족과 계급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민족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지배계급, 중간계급, 노동자계급, 농민계급, 전문가-지식인집단의 태도를 나라별 사례를 통해 구별하고 있다(Breuilly, 1982: 25-51).

에 불과하다고 본다(Wallerstein, 1984: 32-33).

이처럼 여러 계급들마다 각기 민족주의에 대한 입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계급이 맑스적 의미에서 경제적 차원에 의해 결정되는 범주라면, 민족은 그와는 달리 역사적, 인종적, 문화적, 산업적 요인에 의한 복합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민족주의와 계급이 결합한 예는 주로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에서 볼 수 있다. 유럽에서 파시즘과 같은 극우 민족주의 논리가 사회주의 및 민주주의와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것과는 달리,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은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와 결합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제3세계에서의 민족이 아직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족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뒤늦은 산업화로 인해 계급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외세에 대한 일차적인 대립이 가장 중요한 모순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족과 계급의 문제가 중첩되고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 일차적 과제로 주어졌던 일부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민족 사회주의를 추구하게 되었다. 드브레이이는 이러한 민족과 계급 관계에 대해서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와의 결합없이는 승리를 상상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민족공산주의를 현실 가능한 노선으로 간주한다(박호성: 120-121).

그러므로 민족과 계급 사이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통합과 조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럽과 같이 근대 민족의 창출과 자본주의의 발흥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지역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노자갈등을 민주주의의 틀안에 계급타협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계급주도적 정책이 이루어졌다. 반면 민족적 통합의 과제가 제일의 과제로 제기되어온 비유럽에서의 민족은 광범위한 농민층이나 노동자 층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혐오증과 제국주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앞세우는 민족 우선의 정책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 주도하에 민족 해방이 이루어진 곳에서의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였고, 비사회주의-반제국주의 세력의 주도하에 민족해방을 이룬 곳에서의 국가는 민족주의라는 허울아래 근본주의 혹은 국가주의라는 방식의 독특한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

3) 민족과 문화

민족은 항상 그에 상응하는 자신들 고유의 상징, 오래된 역사, 전통의 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의례와 숭배의 대상을 가진다. 역사와 신화, 문화와 언어를

통해 민족적 통합을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독자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은 어느 민족 집단에게서나 공통적으로 보여진다. 흡스봄에 의하면 이러한 전통과 문화의 상징은 국민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나타난다. 즉, 문화와 전통이 오랜 역사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Hobsbawm & Ranger, 1983). 스미스에 따르면 민족이 상상된 것이든 혹은 위로부터 조작된 것이든 간에 이러한 오랜 역사와의 연속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며, 이러한 오랜 역사와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근대 이전(pre-modern)의 족(ethnie)과의 연관에서 나온다고 한다(Smith, 1993). 결국 문화와 민족의 관계는 그것이 창조와 날조의 변증법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인 민족공동체로서의 경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인 것만은 틀림없다.⁹⁾

이미 오래전에 출간된 영국의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와 민족간의 관계는 정치적 민족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의 두가지로 형태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민족의 의미는, 첫째로, 단일 정부라는 정치적 유대에 의하여 통합된 사회로 국가나 나라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단 민족이 그 유사어와 다른 차이점은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강조점에 있다. 둘째로, 민족은 정치적 유대뿐 아니라 기타 다른, 예컨대, 인종, 종교, 언어, 전통 등의 사회 문화적인 유대에 의해 결합된 개인의 집합체라고 한다(김용직: 148). 특히 두번째 측면은 문화적인 결속력에 의해 민족이 이미 근대 국가 이전에도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민족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여러 가지로 정의되지만,¹⁰⁾ 사회학적으로는 사람들의 삶의

9) 민족과 문화의 이같은 연관성 때문에 민족에 대한 분석과 문화에 대한 분석상의 차이점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민족에 대한 분석은 자연스럽게 (민족)문화에 대한 분석을 포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의 제기는 타당성을 가지면서도 문화가 가지는 독자성과 민족의 경계선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즉, 하위문화의 존재, 소위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문화, 문화적 변이 현상의 다양함 등을 민족이 모두 다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같은다. 따라서 문화분석의 독자성과 함께 한 사회의 분석적 구분을 위해서도 민족과 문화의 독자적인 분석과 그 연관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문화는 여러가지로 정의된다. 보통에 따르면 첫째로 15세기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곡물을 기르거나 가축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였고, 둘째로 위의 의미가 16세기에 들어서 더욱 발전해나가면서 인간의 마음과 같은 추상적인 것까지로 확장되었고, 셋째로 사회과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18세기의 계몽주의적 관점에 의거한 일반적인 사회발전의 세속적 과정을 가르

방식, 생존수단, 혹은 생활설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사회적 연대의 기초로서, 사회 질서의 유지를 돋는 요소로서,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퍼스널리티를 획득하는 기반으로서 기능한다(고영복, 1997: 17).

문화와 민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언어, 상징, 의식, 설화는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가진 개인들과 가족들로 하여금 서로 동일체감을 지니게 하고, 원초적 관계의 의미를 부여하며, 정서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집합체를 만들어 준다(슈드슨, 1997: 170). 따라서 현대 국가는 국민들을 통합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언어정책, 공식교육, 집단의식,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가장 강력한 통합의 힘을 발휘한다. 틸리에 따르면 민족의 형성기에 국가는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국민 교육체계의 확립, 표준어의 부과, 전시회, 박물관, 예술 보조금의 지급, 그리고 문화 생산 혹은 문화유산의 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만들어 내며, 의사소통 체계의 설립과 국기, 상징, 국가, 기념일, 의례와 전통을 발명한다고 한다. 이처럼 국가에 의한 민족적 통합은 문화적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Tilly, 1994: 140).

홉스봄은 문화의 뿌리가 되는 전통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한다. 첫째로, 집단들, 즉 실제로 존재하는 공동체 사회든 아니면 조작적인 사회이든 간에, 그 구성원으로서의 정신 또는 사회적인 결합력을 확립시키거나 상징화하는 유형, 둘째로, 제도, 지위 또는 권위간의 관계를 수립하거나 정당화하는 유형, 그리고 셋째로, 구성원의 사회화를 위한 신념, 가치체계와 행위규정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유형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중 두번째와 세번째 유형의 전통은 분명히 창조된 것이지만 세번째 유형이 가장 지배적인 것이고 나머지 기능들은 공동체와의 일체감에서 비롯되어 그 속에 잠재해 있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통해 '민족'이라는 공동체로 표현된다고 한다(Hobsbawm & Ranger, 1983: 9). 이는 민족의 형성에서 전통으로서 문화의 요소가 창조되거나 날조되거나 간에 그것이 구성원들 상호간의 동질성과 결합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의 초기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중교육을 강화하여 언어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일종의 전국 신화나 자신들의 종족적·인종적 뿌리에 대한 동질감을 형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국가나 국기의 제정을 통해 사람들에

쳤고, 넷째로는 각각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민족이나 집단들의 삶의 고유한 양식을 지칭했으며,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넷째 의미와 비슷하나 상징적 차원에 좀더 강조점을 두고,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것보다는 문화는 무엇을 하는가?에 강조점을 둔다(Bocock, 1996: 151-152).

게 일종의 문화적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문화가 담당하는 민족적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공통성의 확보는, 앤더슨이 말한 것처럼, 인쇄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신문·잡지의 보급과 문학작품의 확산을 통한 거리 좁히기, 교통과 통신의 발전에 따른 여행과 순례에 의한 시간·공간의 압축 등에 의해 강화되어졌다. 또한 국가관료제의 정비와 이를 통한 중앙집권적 국가의 개입의 확대는 국가에 의한 문화통합을 가능하게 하였던 요인이다. 특히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한 대중문화의 보급은 지리적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고 통합의 범위를 더 넓은 지역으로까지 확장시키게끔 하였다. 뒤르케임이 말한 것처럼 산업화의 증가가 가져오는 사회적 연대의 강화가 문화적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과 동일한 논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문화가 반드시 국민국가로의 통합만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과소포섭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는 국민국가의 더 작은 단위로의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로서 스리랑카, 북아일랜드, 구소련, 구유고, 체코슬로바키아, 캐나다 등지에서 보이는 민족 분리운동은 서로 다른 상징체계들에 의한 분열작용의 좋은 보기이다(슈드슨: 175-176).

르낭은 민족의식을 매일매일의 국민투표와 같은 것으로 묘사한다. 그의 이와 같은 국민투표에 대한 비유는 사람들에게 강조되는 역사와 뿌리, 문화적 상징체계의 지속적인 조작과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는 것에서 민족의식이 형성된다고 보는 시각에 근거한다. 민족이란 샤를마뉴 시대 이후 유럽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가라는 테두리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구성원들 사이의 의지의 총합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그의 민족이론에는 민족으로 되는 과정에서의 문화의 역할이 결여되어 있다(Gellner, 1987: 10).

겔너는 래디 클리프-브라운의 구조주의 인류학을 발전시켜 구조와 문화 사이의 복합적 관계를 파악한다. 문화가 구조를 드러내는 거울이며 구조의 변화가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구조의 변화에 따라 문화가 그대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화의 변화에 따라 사회안의 지위와 역할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다(Gellner, 1987: 13).

한걸음 더 나아가 겔너는 문화가 역사의 흐름속에서 아주 깊은 사회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문화는 왕조나 국가를 위한 부속품이 아닌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문화는 정치적 보호가 없을 때 국가안에서 존속하고

자 하며, 자신의 경계선을 재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오늘날 자신의 민족극장, 박물관, 대학 등을 갖추지 않은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그 자신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장이 마련될 때까지 문화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문화는 국가안의 이질성이 높을 때, 정치적 혹은 문화적 경계선을 재조정함으로써 동질감을 획득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그는 문화가 산업사회에 서만 민족주의를 가져오게 하는 데, 그 이유를 농경문명에서는 정치체안으로의 문화적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데서 찾고 있다(Gellner, 1987: 17-18).

이와 같이 문화는 그것이 갖는 역사적인 뿌리와 그에 연관된 동질성, 특히 집합체의 정체성의 강화를 통해 민족주의의 기본적인 토양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화적 공동체의 형성은 1민족 1문화 혹은 1국가 1문화와 같은 관념들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1국가 1문화가 반드시 지배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국가안에도 여러 민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각 민족 내부에도 문화는 지역·세대·직종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띸 수 있기 때문이다.¹¹⁾ 이 경우 문화는 때로 서로 충돌하면서 변형을 거듭한다. 더구나 국민국가 사이의 상호작용은 문화접촉을 통해 다른 문화와의 일정한 접합, 변용 내지는 동화, 흡수의 작용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통은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 하나의 집합체가 동일한 뿌리를 가진 역사적인 실재로서 간주하게끔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흑스봄은 이러한 전통이 근대에 들어서서 창조되고 위로부터 날조된 것이라고 단정한다.¹²⁾ 이러한 창조의 과정은 지난 200년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명백히 근대적인 현상의 하나일 뿐이다. 결국 우리가 오랜 뿌리라고 믿고 있는 전통을 통한 민족주의 혹은 공동체적 감정의 창조는 이러한 문화적 상징과 관습, 그리고 위로부터의 날조에 의한 사람들의 창조된 집합적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11)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의 계급성 문제이다. 문화는 계급에 따라 다른 상징과 의미를 획득하며, 이것이 계급투쟁의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소위, 지방문화와 저항문화, 대안문화 등의 논의는 바로 문화의 계급적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예이다. 따라서 문화가 중립적이라든가 혹은 민족적이라는 것만으로는 문화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는 민족과의 관계하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에 한정하여 문화를 분석한다.

12) 흑스봄이 말하는 전통의 창조(invention of tradition)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가르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방적인 것(local) 혹은 잊혀졌던 것의 재사용과 민족적인 수준으로 격상, 잠재적인 것의 재부활 등을 통해 이러한 창조는 가능하다(Hobsbawm and Ranger, 1983: Chapter 1. 참조).

문화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월러슈타인은 문화의 역사적 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근대에 출현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산물로 본다. 문화란 세계경제의 세계적인 자본축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성, 인종, 계급 등의 차별화를 은폐하는 보편주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Wallerstein, 1991: 31-56).¹³⁾ 그러나 이러한 그의 문화 개념으로는 전 자본주의 시대의 문화적 다양성이라든가 자본주의의 발생을 전후로 한 민족과 국가의 형성 과정에 있어 문화와 전통의 역할이 무시될 수밖에 없다.

4) 국가와 계급

국가와 계급의 관계는 국가를 계급지배의 도구로 보는가 아니면 독자적인 혹은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닌 행위자로 보는가에 의해 달리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바라보든간에 국가와 계급은 뗄수 없는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분석은 한 국가내의 계급들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국가와 계급은 긴밀한 결합관계에도 불구하고 인식론적 지평이 다른 분석의 단위로 설정된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분석과 계급에 대한 분석은 분석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도 국가와 계급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이 둘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다.¹⁴⁾

근대 국가의 출현은 자본주의의 출현이라는 거대한 혁명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자본혁명을 담당했던 세력은 다름아닌 신흥 부르주아 세력이었다. 이들은 국가를 통해 자신들의 자유주의 축적 이데올로기와 시장통합을 위한 민족주의의 유포를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가를 국제질서의 기본 단위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맑스는 이러한 부르조아 세력에 의해 장악된 국가를 ‘부르조아의 집행위원회’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맑스주의에 있어 국가는 곧 극복해

13) 월러스타인의 이와같은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Boyne(1991)을 참조.

14) 사실, 국가에 대한 분석은 반대의 방향에서 국가에 대청되는 시민사회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글이 목적으로 하는 바가 국가 단위 내에서의 동학의 분석들을 세우는 시론적 논의에 있는 만큼 ‘국가, 시민사회, 시장’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계급에 대한 분석에 한정하도록 하겠다.

야 할 대상이자 미래에 소멸할(withering away) 운명을 지닌 정치체였다.

이와 달리 베버에게 국가는 단순히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에 불과한 계급지배의 도구이기보다는 다차원적인 요소들의 결합으로 설명되어야 할 정치체였다. 베버에게 국가는 폭력을 독점하며, 주권을 지닌 배타적인 조직이며, 주민들에 대해 합법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하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장은 국가를 일정한 영토안의 동질화된 국민에 대해 정당한 권력에 의해 통치하는 주권을 갖춘 조직체로 정의한다(Held, 1996: 7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안으로는 사회구성의 내용과 바깥으로는 세계체제와의 관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Hamilton, 1982). 이를 국가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성격은 국가와 경제구조, 국가와 계급구조, 국가와 세계경제, 국가와 국제정치와의 복합적인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국가자율성이란 결국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종자본 내지 자본분파의 이해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급대립이라 할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관계와,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체제의 두 요소라 할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국가간 국제체제와의 연관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자율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러한 국가자율성의 여러 유형을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2>이다.

이렇게, 국가 자율성이 국가의 대외적 조건에 따른 국가의 자율성의 정도를 논하는 것이라면, 국가능력이란 국가의 정책의 성격과 이를 실행의 정도에 따라 구분될

<표 2> 국가자율성의 유형

	도구적	구조적	
대내적	대내도구적	대내구조적	反단기경제이익 反단기경제이익 反단기정치이익 反단기정치이익
대외적	대외도구적	대외구조적	反단기경제이익 反단기경제이익 反단기정치이익 反단기정치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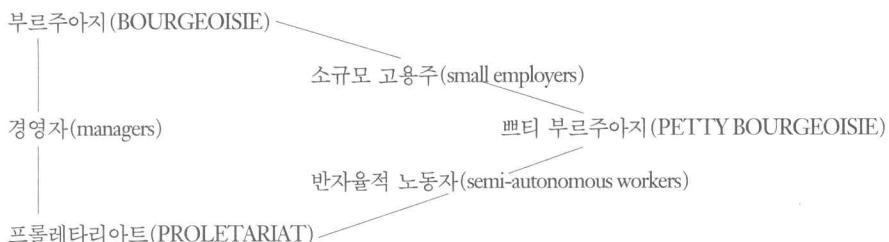
*자료: 손호철, 1991: 45.

수 있다.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이 반드시 정(正)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의 정책분야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⁵⁾ 마이클 만(Michael Mann)은 이러한 국가능력을 전제적 힘(despotic power)과 사회기반력(infrastructure power)로 구분하고, 전자를 국가엘리트가 시민사회에 대해 행사하는 분배적 힘으로서, 후자를 국가의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능력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만의 개념은 그의 의도가 한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거시적인 것으로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분야의 결정과 실행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들을 다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박찬웅, 1998). 따라서 국가는 국가자율성과 더불어 국가능력이라는 총체적인 고려속에서 그 유형이 좀더 구체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계급의 문제는 보다 다양한 논쟁의 주제이다. 맑스와 베버에게서 발견되는 고전적 계급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여러 가지 비판과 현실적 합성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에 고전적인 계급범주를 벗어나는 새로운 계급론이 나타나고 있다(크롬프顿, 1996). 이른바 신중간계급의 등장과 시민운동의 확장은 계급 개념 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와 계급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맑스에 의하면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와 생산관계상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계급은 사회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개개인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베버에 있어 계급은 단지 부와 신분과 권력이라는 세 차원중의 하나로서 시장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의 계급론은 새로운 계급의 등장과 함께 네오 맑스주의적 입장과 네오 베버리안적 입장으로 전개되고 있다. 네오 맑스주의자인 라이트는 ‘모순적 위치’(contradictory position)를 설정하여 부르조아, 프롤레타리아, 빈티 부르조아의 사이에 경영자, 소규모 고용주, 반-자율적인 노동자들을 설정하는 ‘계급지도’(class map)을 그리고 있다(Edgell, 1993: 17-18). 그의 이러한 모순적 지위는 세가지 통제에서 비롯된다. 즉, 투자와 축적과

15) 국가능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에 접근하는 데서 국가중심적 입장과 사회중심적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국가중심적 입장은 최근 한국 등의 경제발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중요하게 논의하는 에반스, 암스텐, 헤가드, 웨이드 등의 입장이 대표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이들은 국가를 하나의 행위 주체로서 상정하고 있다. 반면, 사회중심적 입장은 국가정책이 사회적인 요소들 즉, 자본주의 발전정도, 균대화 정도, 계급들간의 갈등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고 실행된다고 본다(박찬웅, 1998).



*자료: Edgell, 1993: 18.

〈그림 1〉 라이트의 계급지도 |

정에 대한 통제,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통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지도에 의한 계급분류도 착취개념의 보강을 통해 다시금 뒤바뀌게 된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그렇지 못한자를, 기술을 소유한 자가 그렇지 못한자를, 조직적 자원을 가진자가 그렇지 못한자를 착취한다는 세가지 유형을 보강하게 된다. 라이트는 결국 이러한 세가지 착취개념을 보강한 계급지도 II를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라이트는 현대에 있어 계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dgell, 1993: 24에서 재인용).

첫째, 계급은 단계적인 범주로서 (gradational terms) 규정해서는 안되고 관계속에서 (relational)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계급 관계의 핵심은 시장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생산조직상 (social organization of production)의 위치이다.

셋째, 계급 관계의 분석은 기술적인 노동분업 (technical division of labour) 혹은 권위적 관계 (authority relations)가 아니라 착취과정 (process of exploitation)에 대한 연구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이와 달리 베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기회에 관하여 특수한 인과적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질 때, 이 구성 요소가 상품의 소유와 수입에 대한 기회라는 경제적 이해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나타날 때, 그리고 이 요소가 상품 또는 노동시장의 조건 아래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계급이 맑스의 주장처럼 생산관계에서의 총체적 위치라기 보다는 시장상황에서의 생활기회로 파악하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그에게 계

생산재(Assets in the means of production)

소유 (owners of means of production)		소유하지 않음[임노동자] (non-owners[wage labourers])		
A.	1. 부르주아지 (Bourgeoisie)	4. 전문경영인 (expert managers)	7. 반전문경영인 (semi-credentialled managers)	10. 비전문경영자 (uncredentialled managers)
	2. 소고용주 (small employers)	5. 전문감독자 (expert supervisors)	8. 반전문감독자 (semi-credentialled supervisors)	11. 비전문감독자 (uncredentialled supervisors)
	3. 땅띠부르주아지 (petty bourgeoisie)	6. 전문비경영인 (expert non-managers)	9. 반전문노동자 (semi-credentialled workers)	12. 프롤레타리아 (proletarians)
C.			+ > 0 -	조직재
기능/신용재(Skill/Credential assets)				

- *A. 노동자를 고용하고 자신은 일을 하지 않는 자본가(owns sufficient capital to hire workers and not work)
- B. 노동자를 고용하지만 자신도 일을 해야만 하는 자본가(owns sufficient capital to hire workers but must work)
- C.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일하는 자본가(owns sufficient capital to work for self but not to hire workers)

**자료: Edgell, 1993: 21.

〈그림 2〉 라이트의 계급지도 //

급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결정적인 요소라기 보다는 지위(status)와 더불어 권력(party)에서의 분배현상의 하나일 뿐이다. 네오 베버주의적인 계급론은 골드소프의 사회계급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는 호프-골드소프 척도(Hope-Goldthope scale)를 이용하여 직업 범주들을 나누는 데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범주를 구분한다 (Crompton, 1996: 49,51, 84).

〈표 3〉 사회계급의 일곱 가지 범주

서비스	I 고급 전문직, 행정가, 임원; 거대 산업체의 경영인, 거대 재산가 II 하급 전문직, 행정가, 임원; 고급 기술자; 소기업 소산업체의 경영인, 비육체 종업원의 감독자
중간	III 행정과 상업에 종사하는 일상적 비육체 — 주로 사무원 — 종업원; 서비스업계의 일반 종업원 IV 소재산가, 자영업을 하는 기술자 V 하급 기술자, 육체 노동자의 감독자
노동	VI 숙련 육체 노동자 VII 반숙련, 미숙련 육체 노동자

*자료: 크롬프顿, 1996: 84

계급에 대한 위와 같은 두가지의 시각은 주로 정치경제적인 입장에 기반한다. 그러나 톰슨은 문화론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그에 있어 계급은 정치적, 경제적 모순 보다는 그들이 공유하는 역사적, 문화적 자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그러므로 그는 “나는 계급이 역사적 현상이라고 강조해둔다. 나는 계급을 ‘구조’나 ‘범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는 어떤 것으로 파악한다”(크롬프顿, 1996: 59에서 재인용). 이러한 톰슨의 입장은 그간의 전통적인 맑스주의적 경제분석에서의 이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문화적·역사적 변수를 중시하는 계급론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미 그람시는 단순한 경제결정론적인 계급구분을 반대하여 국가를 둘러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대결과 투쟁으로 파악한다. 그는 해게모니 획득이라는 동의의 측면에서 계급관계를 고찰함으로써 국가를 둘러싼 계급 사이의 투쟁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또한 이러한 ‘지적·도덕적 지도력’으로서 해게모니 개념은 최근에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에서 국가의 정당성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Gramsci, 1971: 57).

계급형성과 계급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와 계급의 관계는 복잡하다. 루시마이어는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급사이의 세력균형의 변화에 있다고 지적한다(루시마이어, 1997: 455). 나아가 민주화는 계급이익에 의해 저항받기도 하고 추동되기도 하지만, 대체

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것은 피지배계급이었으며 이와 반대로 현상유지로부터 이득을 얻었던 계급들은 예외없이 민주주의에 저항하였다고 본다. 이는 계급관계가 국가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장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변수임을 말해준다. 무어가 근대화의 세가지 길로서 민주주의, 패시즘, 사회주의를 거론할 때 계급 사이의 세력관계를 중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국가의 형태 및 민주주의는 계급 사이의 힘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국가자율성의 정도도 국가와 계급이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나라들에서 지배계급으로부터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높은 강한 국가(strong state)의 모습을 발견하는 반면, 남미의 나라들에서 지주계급이나 대자본가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국가의 자율성이 미약하고 약한 국가(weak state)의 면모를 띠는 것도 바로 계급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사회의 조직과 변화 원리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총체적인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근대화라는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유럽에서와 같이 전통의 계승과 재창조에 의해 이루어진 근대화와는 달리 한국은 전통의 급격한 단절과 파괴를 통해 근대화가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근대화가 한국사회의 조직 원리와 변화 역학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동아시아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후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일본의 경우 서구의 근대화의 물결속에서도 자신들의 전통을 현대와 결합하는 창조적 조직원리를 만들어 내었다고 볼 수 있다(Westney, 1987). 이점에서 일본의 화흔양재(和魂洋才)가 한국의 동도서기(東道西器)나 중국의 중체서용(中體西用)에 비해 돋보이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한국사회의 조직과 변화의 원리의 두 축은 가족(혹은 가문)과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유교적 가치체계가 사회질서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이로부터의 탈피는 곧 사회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하였다. 여기서 모든 행위의

중심은 가족이었고, 가족의 뿌리로서 가문에 따라 사회적 신분의 등급 매기기 (grading)도 정당성을 갖게끔 되었다. 또한 가문을 중심으로 한 효의 원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제일의 가치였다. 효는 육체적 조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혈연관계의 전체를 지배하는 윤리로 기능하였다. 이는 곧 한국사회의 핵심적 조직원리로서 혈연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국문화의 특징인 연고주의의 기저에 혈연이 사회깊이 뿌리박고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국가중심 사회라는 데 있다. 이미 중앙집권적 권력체제가 천년 이상에 걸쳐 동일한 지역적 범위에 존속했던 역사적 경험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조직원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였다. 가족을 우선적인 가치로서 여기던 유교적 질서 하에서 충은 곧 국가에 대한 효로서 상호 교환 가능한 등가물이었다. 이러한 충의 원리는 곧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질서가 되었다. 그러나 충과 효가 맞부딪칠 때 효가 충을 압도하곤 하였다. 이는 한국사회가 국가중심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그 저변에 가족주의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조직원리는 근대화의 진행과 함께 변화하면서 새로운 변동의 동학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서 논의의 편의상 세 가지 조직과 변화의 원리를 지적하고자 한다.

1) 단일 민족성의 신화와 국가중심성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만큼 강력한 국가주의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은 근대화의 과정에서도 국가를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서구와의 접촉 이후 근대에 들어와서야 지방분권적 상황을 벗어나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체론(國體論)에 기반하여 중앙집권화를 시도한 것과는 달리 한국과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 지역에서 왕조를 달리한 중앙집권적 체제가 지속되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중국과 달리 단일 민족의 뿌리를 갖고 있는 한국은 공통의 지리적, 문화적, 혈연적, 경제적 특징의 바탕위에서 공고한 통합성을 유지해 오면서 비교적 강한 민족주의적 지향을 나타내 왔다. 이렇듯이 오랜 역사에 뿌리를 둔 민족주의적 지향이 외세의 침탈에 대한 저항 민족주의의 기반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신화는 이런 오랜 역사적 전통의 바탕위에서 아주 뿌리깊이 각인되어 오고 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민족형성에 실패한 근·현대사의 경험과 무관하게 한국인들의 감정은 민족성의 단일함과 순수함, 그 역사적 유구함을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단일 민족성의 신화가 사회의 곳곳에서 그 조직적 원리로서 깊이 배어 있다. 특히 일본을 마주한 배타적 민족감정의 표출은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며, 국난에 맞서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이를 극복하자는 애국주의 이데올로기가 횡행하기도 한다.¹⁶⁾ 이러한 민족 감정이 눈에 보이지 않게 가족, 조직, 국가에 대한 일체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민족주의의 성향을 보여왔다. 근대 국민국가로의 형성을 완성하지 못한채로 분단된 결손국가체제를 지속하고 있지만 실상 남북은 민족 감정에 있어서는 외관상 동일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한국 민족주의가 애족주의, 애국주의, 집단의식, 이념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¹⁷⁾ 국가주의와의 결합이라는 데 그 주요 특징이 있다는 점이다. 박정희의 한국적 민족주의, 민족적 민주주의나 반일 민족주의 등은 한국 민족주의가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전개된 대표적인 보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주의와의 결합은 한편으로는 성장이데올로기와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이데올로기로 표현되면서 개발연대에 억압적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화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

사실상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부문의 우위는 현저하다. 비록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민간부문이 상당한 정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부문은 전사회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경향은 초기 발전의 국면에서는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였지만, 그 이후 발전의 심화 과정에서는 제약을 주고 있다. 국가의 비대화가 건전한 시민社会의 성장을 가로막음으로써 국민 모두가 더

16) 대표적인 보기로는 IMF 사태발생 당시에 벌어졌던 전국민적 '금모으기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는 대중동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조선일보의 '태국기 물결 운동'이라는 것에서 보이듯이 보수적 역할에 그친다.

17) 김동성(1995)은 한국민족주의를 구성하는 네가지 신념체계로서 애족주의, 애국주의, 집단의식, 이념주의를 듣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한국내의 학생운동이나 지식인, 여론주도층의 민족주의적 담론 분석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한국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구조적 조건과 역사적 뿌리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불어 사는 복지사회로의 진입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은 단일 민족성의 신화에 기반을 둔 강력한 국가주의에 의한 변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므로 사회의 모든 분야를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계획하고, 그리고 국가가 지도하는 형태를 보여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국가주의의 과잉은 시민의 권리 보다 시민의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여러 사회부문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국가주의는 전지구화의 격랑속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문화적 동질성과 집단주의의 원리

한국사회는 끈끈한 문화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비록 근대사회로의 진입 과정에서 전통의 단절과 파괴로 인하여 문화적 동질성이 훼손되고 있지만, 가족, 조직, 국가 수준에서 사회통합의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특히 유교의 교리는 한국민들의 의식과 행동 면에서 일상생활에 강하게 뿌리박혀 있다. 가족 수준에서의 가부장제, 공장 수준에서의 '공장 권위주의',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의 정치적 권위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배면에 유교적 가치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동질성은 주로 국민통합의 기제로 작동해 왔다. 이는 한국의 문화가 본질적으로 '일국가 일문화' (one state one culture)라는 민족주의 신화에 부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랜 국가의 전통에 뿌리를 둔 중앙집권적 체제에 의해 강한 동질성을 유지해 오면서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동질성은 지나친 '우리' 의식의 강화와 더불어 배타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강한 문화적 동질성은 과도한 순결성의 차원에서 서구의 충격에 대하여 외부혐오적인 (-phobia)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근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함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한국문화는 근대화의 추진의 과정에서 서구화(Westernization)의 물결에 휩쓸려 자아준거성이 약화됨으로써 전통 창조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¹⁸⁾ 사실상 한국사회에서 전통문화의 유산은 사회의 조직원리로서 기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화에 대한 대항문화로서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

여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조직의 원리로서 우리 문화는 이중적 모습으로 사회 곳곳에 펼쳐져 있는 상태이다. 재래문화와 외래문화의 혼합현상이 이종이합(異種異合)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 생활에서부터, 공사(公私) 논리의 공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혼합, 법과 규범사이의 혼란 등 광범위하게 걸쳐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유교자본주의론'도 다름아닌 한국사회의 근대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동아시아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율과 희생정신, 집단주의, 조직에의 충성, 수직적 위계질서에 대한 순종 등이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기여하였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유교문화를 출발점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경제성장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는 문화 절대주의의 오류는 접어두더라도 안으로는 사회구조적 변수와 바깥으로는 세계체제적 요인을 무시한 측면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동질성은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자라나고 이것이 사회의 중요한 조직원리로 자리잡는 기본 토대가 되어 왔다. 물론 근대화 과정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대세이고, 이런 경향이 세대간의 차이에 의해 보다 확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 조직, 국가에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깊은 뿌리를 갖고 남아있다. 이러한 집단주의의 가치는 개체 보다는 전체를 중요시 여김으로써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자율 신장과 사회의 민주화에 지장을 주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적 동질성은 사회조직의 원리로서 집단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의 원리는 사회를 결속하여 유지시켜 주는 반면 권위주의와 맞물려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동질성은 다양성과 이중성에 의해 그 성격이 바뀌어 가면서 집단주의도 개인주의로 부터의 도전과 아울러 집단주의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8) 한국문화에 대한 필자들의 생각은 전통의 상실이라기 보다는 전통을 끊임없이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의 상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오랜 전통은 곧 현실에 있어서 새로운 전통의 창조를 통해 계승되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전통의 창조가 없이는 옛 전통은 상실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 계급주의와 민주주의의 대치

우리의 경우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권당당세력이나 체제비판세력은 모두 민족(민족주의)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구하려 하였음을 부인키 어렵다. 실제로 해방이후 민족주의 감정이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 자본주의적 계급문화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조건에서 민족주의 감정의 발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라는 불행한 역사적 경험과 연관하여 자연스러운 이데올로기적 표현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급속하고 격렬한 산업화의 진행 과정에서 계급 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계급의식의 고양은 남북분단이라는 민족문제에 계급문제를 중첩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볼 수 있는 민족문제의 분출과 계급갈등의 접합은 이러한 이중구조의 표출임에 다름아니다. 그러므로 계급주의의 성격도 민족문제 위에서 계급 대 계급의 대립이라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어 왔다.

서구에서의 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갈등과 타협을 통한 사회협약의 기반 위에서 개화되었다. 이러한 사회협약은 사회민주주의, 복지자본주의, 민주사회주의라는 여러 이름아래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라는 두 축은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서 견제와 포용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한국의 계급주의는 처음부터 철저한 부정과 배격의 대상이었다. 한국에서의 계급주의는 서구와 같은 계급운동의 모습과는 전혀 달리 보수를 가장한 극우와 진보를 표방하는 좌익의 대결이었으며, 전자의 압도적인 우세속에서 대화와 타협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좌익은 한국전쟁이후 완전히 궤멸상태에 들어갔으며, 남한과 북한으로의 두 국가의 분리정립은 '제3의 길' 을¹⁹⁾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분법적 관점과 이데올로기만을 강요해왔다. 이러한 와중에서 계급정치와 계급주의는 발불일 곳이 거의 전무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극우' 와 극우에 대한 부정으로서 '반체제' 의 대립이 항상 계급주의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19) 여기서의 '제3의 길' 은 최근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든스의 주장이 아니라 해방 당시 좌·우의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흐름들을 가리킨다. 이런 흐름으로는 김구·김규식의 민족주의 우파의 길, 여운영 등의 민족주의 좌파의 길이 대표적으로 거론될 수 있겠다.

실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계급주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양적 성장, 지식인 계층의 성숙, 그리고 맑스주의 이데올로기의 유입 등에 힘입어 전개되어 왔다. 현재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1996년 시점 약 2천118만 8천명이며, 이중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원, 단순 노무직 및 사무직원의 비율이 59.5%를 차지한다. 여기에 서비스판매직이 22.5%, 농림어업직이 11.1%,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비율이 14.4%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1997: 151-157). 이는 한국사회의 직업구성에서 제조업 분야 노동자계급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가르켜 준다. 특히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의 비율이 27.2%를 차지함으로서 여전히 대규모 공장 노동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율은 1996년에 13.3%를 기록함으로써 아주 낮은 상태에 처해있다. 노조조직률의 경우 1989년 19.8%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1997: 206-207). 이는 1980년 후반 이후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나타난 사회주의권의 쇠퇴, 폭력혁명적 계급 이데올로기의 약화,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과 같은 점진적인 민주화의 영향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계급주의는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사회협약이나 계급타협을 통한 것은 아니다. 이는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성쇠를 거듭한 노동운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운동의 진전과 더불어 조금씩 성장해왔던 노동자계급의 사회세력화는 냉전체제의 해체와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성장과 동시에 침체를 맞이하게 되었다. 옛 사회운동을 대신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에서 볼 수 있는 계급주의의 약화 또한 노동운동의 난관을 잘 드러내 준다. 한국에서의 계급주의는 그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 민주주의의 계급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지구화라는 세계적인 격변기의 한복판에서 시장개방의 연장선위에서 나타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계급타협의 기반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민주주의 사이에 큰 격차를 노정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조직원리로서 아직 발양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놓여 있다. 가족, 조직, 국가 수준에서 권위주의 해체의 징후가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의 착근으로 대체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4. 맷음말에 대신하여

이글은 한국사회의 조직과 변화의 원리가 갖는 본질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와 민족과 계급과 문화라는 네가지 주요 주제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물론 네가지 주제가 지니는 인식론적 기반의 차이로 인하여 상호관련의 틈새를 메우기가 쉬운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과 계급과 문화가 사회과학의 통합적 문제틀(holistic problematic)을 구성할 수 있을 때 한국사회의 정태와 동태 분석에서 보다 균형잡힌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통(通)역사적으로 볼 때,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는 국가와 민족과 계급과 문화 사이의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남북분단의 과정과 분단체제의 지속에서 우리는 위의 네 가지 개념의 복합적 역동성의 단면을 쉽게 읽게 된다. 하나의 민족에 두 개의 국민을 갖는 민족주의의 가식, 역사동력에 대한 문화와 계급의 시각 대립,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지 못하는 친근대성과 반근대성,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무관하게 나타나는 국가주의의 만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주의.국가주의. 계급주의.민주주의가 한국사회의 역사속에서 조화와 견제, 포용과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혼란과 충돌을 일으켜 왔으며, 또한 근대화로의 진행과정에서 이것이 불균형적이고 대립적인, 그리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평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천년기(millennium)를 앞두고 한 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남북분단을 하나의 통일된 민족국가로 재통합시켜야 하는 지난한 현실에 놓여 있다. 그러나 지구화의 추세가 국가 그 자체의 존립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덧붙여 경제위기라는 형태로 남북한이 조금 맞고 있는 발전의 병목을 고려할 때 민족의 결합에 바탕한 하나의 통일 국가형성이 매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실 최근 일부 인문학도나 사회과학도들 사이에 지구시대에 민족문제는 부차적 중요성밖에 지니지 못하며, 차제에 민족과 국가의 복합으로서 민족국가라는 고정 관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치 오늘의 현실은 자본주의에

의한 전지구화에 따라 국가에 연관된 여러 발전 프로젝트가 퇴장당하는 시점이다.

더욱이 중요한 문제는 지난날 우리 발전의 모델로서 근대화가 서구의 프로젝트였듯이, 현재의 지구화도 구미적 연원을 지닌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식의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주주 모델(shareholder model)이 유럽식의 공존과 협평을 강조하는 이해관계자 모델(stakeholder model)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지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고 보아진다. 무한경쟁,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는 결국 계급의 양극화와 그에 따른 첨예한 갈등과 투쟁을 잠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의 과제는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이끌어 왔던 정태와 동태의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함께 향후 지금까지의 사회변화의 동학을 변화시키는 ‘동학의 동학’도 아울려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학의 변화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을 조망하고,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시대적 소명인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복(1997), “문화의 이해”, 고영복 편, 『문화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
- 김동성(1995), 『한국민족주의 연구』, 오름.
- 김용직(1995), “민족주의, 국제관계, 근대성”, 김달중·박상섭·황병무 공편,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 나남.
- 디트리히 루시마이어(Dietrich Rueschemeyer)(1997),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박명립 외 옮김, 나남출판사.
- 로버트 알포드 & 로저 프리드랜드(Robert R. Alford & Roser Friedland)(1989), 『국가이론의 재조명』, 홍원표 옮김, 인간사랑.
- 로즈메리 크롬프톤(Rosemary Crompton)(1996), 『현대의 사회계급론』, 정태환·한상근 역, 한울아카데미.
- 마이클 슈드슨(1997), “민족사회의 문화와 통합”, 고영복 편, 『문화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
- 박찬웅(1998), “국가능력과 국가 개입방식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32집 겨울호, 한국사회학회.
- 박호성(1997),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당대.
- 방중영·허종국(1998), “족군·종족·민족 그리고 중화민족”, 『한국과 국제정치』 제14권 제1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1991),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윤형숙 역, 사회비평사.
- 성경륭(1995), 『체제변동의 정치사회학』, 한울.
- 손호철(1991),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풀빛.
- 신육희(1995) “분석수준과 분석단위에 관한 새로운 논의”, 김달중·박상섭·황병무 공편,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 나남.
- 앤쏘니 기든스(Anthony Giddens)(1991), 『민족국가와 폭력』, 진덕규 역, 삼지원.
- 에릭 홉스봄(Eric J. Hobsbawm)(1994),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강명세 옮김, 창작과 비평사.
- 임마누엘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1993),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의 문명』, 나종일·백영경 공역, 창작과 비평사.
- 임현진·공유식·김병국·설동훈(1996), “한국에서의 민족국가 형성 및 전개의 동학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 『성곡학술논총』, 성곡학술문화재단.
- 찰스 틸리(Charles Tilly)(1994),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이향순 역, 학문과 사상사.
- 폴 케네디(Paul Kennedy)(1993), 『21세기 준비』, 변도수·이일수 역, 매일경제신문사.

- 통계청(1997), 《1997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한스 콘(Hans Kohn)(1981), “민족주의의 개념”, 백낙청 역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창작과 비평사.
- 호러스 데이비스(Horace B. Davis)(1981), “마르크스 민족이론의 비판”, 백낙청 역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창작과비평사.
- Bocock, Robert(1996), “The Cultural formations of Modern Society”, Stuart Hall, David Held, Don Hubert, and Kenneth Thompson (eds.), *Modernity*, Cambridge: Blackwell.
- Boyne, Roy(1991), “Culture and the World-System”, in Mike Featherstone (ed.),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London: Sage.
- Breuilly, John(1982), *Nationalism and the Stat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illy, Charles(1994), “States and Nationalism in Europe 1492-1992”, *Theory and Society*, vol. 23/1.
- Edgell, Edgell(1993), *Class*, London, New York: Routledge.
- Gellner, Ernest(1983), *Nations and Nationalism*,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1987), *Culture, Identity, and Poli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msci, Antonio(Ed. by Quintin Hoare and Geoffrey N. Smith) (1971), *Selections from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Hamilton, Nora(1982), *The Limits of State Autonomy: Post-Revolutionary Mexico*,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ld, David(1996),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te”, Stuart Hall, David Held, Don Hubert, and Kenneth Tompson (eds.), *Modernity*, Cambridge: Blackwell.
- Hobsbawm, Eric J. and Ranger, Terence(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z, Juan J. & Stepan, Alfred(1996), “Stateness, Nationalism, and Democratization”, i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Californi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igdal, Joel S.(1997), “Studying the State”, in Mark Irving Lichbach & Alan S. Zurkerman (eds.), *Comparative Poli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iband, Ralph(1969),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 Pierson, Christopher(1996), *The Modern State*, London: Routlege.
- Poulantzas, Nicos(trans. by T. O' Hagen) (1973),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New York: New Left Books.
- Smith, Anthony D.(1986), *The Ethnic Origin of Nations*,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 _____(1993), “The Nation: Invented, Imagined, Reconstructed?”, in Marjorie Ringrose & Adam J. Lerner (eds.), *Reimagining the Nation*, London: Open University Press.
- Volger, Carolyn M.(1985), *The Nation State: The Neglected Dimension of Class*, Aldershot & Brookfield:

Gower,

Wallerstein, Immanuel(1998), "The Construction of Peoplehood: Racism, Nationalism, Ethnicity", in *Etienne Balibar and Immanuel Wallerstein, Race, Nation, and Class: Ambiguous Identities*, London: Verso.

_____ (1984), *The Politics of the World Economy: The States, the Movements, and the Civiliz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91), "Culture as the Ideological Battleground of the Modern World-System", in Mike Featherstone (ed.),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London: Sage.

Westney, D. Eleanor(1987), *Imitation and Innovation: The Transfer of Western Organizational Patterns to Meiji Jap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State, Class, Nation, and Cultur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Statics and Dynamics of Korean Society

Lim, Hyun-Chin* · Chung, Young-Chul**

Korea has undergone a drastic and radical social change over the past five decades. To understand fully and thoroughly the underlying nature of such social change in Korea, the article discusses the problematic of the state, class, nation, and culture from a holistic perspective. First, the state and nation are intertwined very closely. While nationalism created nation in the growth of which the state played central role in early developers, the state made use of nationalism to bring about nation in late developers. Second, nation and class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Class preceded nation in former socialist countries, whereas nation suppressed class in capitalist countries. Third, nation and culture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Nation has its own culture in the form of traditions, symbols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Comparative Sociology, Study of Social Development

Major Publication: *Global Change and Development of Korea in Global 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8

E-mail: hclim@prome.snu.ac.kr

**Lecturer, Kyunghee University

Research Area: North Korea Society

Major Publications: "A Study on Foreign Economic Policies of DPRK" (MA. Dissertation, Dep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tudy on the everyday life of North Korean people", (96) *Paper collection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Department of Korea Unification, 1996, co-work with Kim, Gui-ok)

"A Characteristics and Change of the Mechanism of Social Control in North Korea" (1997 autumn/winter),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Tel. 02) 880-6412

and values, as frequently used as a means to integrate its members. Culture in this sense is an integral part of nation. Fourth, the state and class are contradictory in nature. Marxism has emphasized the state as an instrument of managing the interests of the dominant class. By contrast, liberalism has stressed the state as a neutral arena where group interests are contested. On the whole, in Korea these four concepts of the state, class, nation, and culture manifest themselves as state centrism, single nationality, cultural homogeneity, and antinomy between nationalism and classism. It is thus argued that the clash among some elements of the four constellations makes a sense to explain the dependent capitalism, the retarded democracy, the immature civil society, and the broken nation-state.